



濁流清論

제32호 2014년 6월 11일(수)

발행인 : 김호섭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juok@aj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세월호 침몰은 유민(流民) 사회의 예견된 인문학적 재난이다	1
특집: 박정희 시대와 함께 침몰한 세월호	4
특집: 정치학자의 눈으로 본 세월호 사건	7
특집 : 세월호 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10
교수회 소식	12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세월호 침몰은 유민(流民) 사회의 예견된 인문학적 재난이다¹⁾

영어영문학과 정 경 훈

세월호가 침몰한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무엇인가가 계속 잡아당겨 할 수 없이 팽목항을 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에 다녀갔다는데 분위기는 썰렁했다. 희생자 가족들이 머무는 텐트의 바깥 쪽 하얀 벽면에 까만 싸인펜으로 가냘프게 쓰인 글귀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다. “어여와라 잔소리 그만할게,” “오늘 본 나뭇잎이 너무 파랬다/ 또, 해가졌다,” “나는 우리가 좋은 이별로 끝낼 수 없다는 게 전혀 슬프지 않다./ 나는 우리가 좋은 인연이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는 내게 그 자체 그 순간만으로도 완벽했다.”

어린 자식을 저 차디찬 바다에 잃어버린 부모의 애끓는 마음이 배어있는 글귀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했다. 팽목항 바닷가 콘크리트바닥엔 탁자가 하나 있었고, 거기엔 집에 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먹으라고 부모들이 갖다 놓은 초코파이, 피자 등이 바닷바람에 말라 가고 있었다. 나는 바다를 향해 쉼 없이 염불하는 스님을 따라 횡사한 아이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했다.

귀경길에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1) 이 글은 2014년 5월 26일 아주대 학보의 <원천시론>에 실린 「세월호 침몰은 인문학적 재난이다」를 확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밤 12시가 되었으나 조문객들이 줄지어있었다. 분향소 실내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수백 개의 영정과 위패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거대한 영정들 앞에 가슴이 철렁했다. 영정들에게 가까이 가자, 아이들이 죽기 전에 부모에게 보낸 동영상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컷가엔 무서움의 엄습을 막으려 서로 격려하며 재잘거리던 아이들의 소리가 쟁쟁했다. 이들은 왜 여기에 있는가? 도대체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분노가 치솟았다. 도대체 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은 이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탈출했는가? 해경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뭘 했는가? 비리와 부정과 탐욕으로 사업을 해온 유병언은 측은지심이 없는 괴물인가? 유병언과 이준석은 본래부터 괴물인가?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 해경, 청해진 회사 경영진,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 해운업 관련 공무원들 등 세월호 참사를 만든 이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나’ 제일주의, 이익의 숭배였다. 이들에겐 승객 등 타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나 어려운 처지에 처한 타자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는 타자윤리의 감성과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들에겐 타자와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상생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고, 오로지 나의 이익만이 중요했다. 이것이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다. 이 괴물은 어디서 왔는가? 이들은 본래부터 그런 괴물이었나? 세월호 침몰은 이들만이 만든 것인가?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와 사회철학자 알튀세에 따르면, 신체적 증상(symptom)은 많은 심리적

요인과 기억들이 중층결정 (overdetermination) 되어 발생하고, 사회적 사건도 수많은 사회적 요소들과 역사적 기억들이 중층결정하여 일어난다. 세월호 침몰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 몇 몇 사람들만이 가담하여 일으키지 않았다. 유병언, 이준석, 해경은 세월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다. ‘나’ 제일주의와 이익의 숭배, 타자 무관심, 윤리감성과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면, 이 원인은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자라났다.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일제의 조선 강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피식민지 조선인들은 자신을 지켜줄 조국이 없었기에, 만주, 상해, 일본 등으로 이주 가든, 조선 땅에서 살든, 이들은 자기를 지켜줄 공동체가 없는 유민(流民)이었다. 이들이 사는 땅의 법과 질서는 이들이 긍정하고 내면화하고 자기화할 수 있는 공동체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이들을 억압하는 압제자의 것이거나 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냉정하거나 박대하는 다른 나라의 것이었다. 당연히 조국이 없는 유민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존이었고, 자기 생존을 위해 중요한 돈과 권력이었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느끼거나, 공동체 안의 이웃 타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지는 윤리의식이 이들에게 심각하게 결핍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는 이준석 선장의 위대한 선배를 목격하게 되었다. 6.25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당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시민들에게 자신은 “서울을 사수할 것” 이라고 말하여 시민들이 피난 가는 것을 막은 후 한강철교를 끊게 해서 서울에 머물던 많은 시민들을 북한군 점령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었다.

국민의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는 “부끄럽게도 서울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시민들이 각자 피하라”고 알렸어야 했다. 초대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의 인간성의 비극이요 인문적 재난이었다. 이를 본 한국국민들에게 국가가 무엇이었겠는가?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켜줄 공동체가 어디 있었겠는가?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에 살면서 조국이 없는 유민이었다. 일제 때처럼 이들이 기댈 것은 자기 몸뚱이와 돈뿐이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동안 법과 질서와 윤리는 권력과 금력의 하수인이 되거나 왜곡되었다.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유민 의식은 ‘나’ 제일주의, 이익과 돈과 성공의 숭배로 진화했고 이러한 정신과 문화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70-80년대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독재에 저항한 결과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고 고초를 겪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고, 상식을 과도하게 벗어난 이상한 판정인 bbk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았고,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 어뢰의 공격을 막지 못해 많은 병사들을 죽게 만들었는데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장군들 중 어느 누구도 처벌받거나 책임지기는커녕 승진하는 경우를 보았고, 많은 재벌들이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쉽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보았고,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 수 십 년 동안 윤리는 물론이고 공동체의 최소 근간인 법과 질서를 깨버려도 권력과 돈이 있으면 법과 권력이 용서를 해주는 것을 보아온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권력과 돈을 쟁취하는 데에 성공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권력, 돈, 성공의 숭배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움직이는 지배철학이 된 것도 당연하다.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구성원 간의 배려와 책임이 중요한 것임을 초중등 교육이 비중있게 가르쳐야 할텐데,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과 경쟁만이 강조되고, 인성교육은 쓸모없는 장식품으로 전락하였다. 대학에서도 학생에겐 성적과 취업이, 교수에겐 연구업적이 최고가치가 된지 오래되었다. 대학에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큰 배움’ (大學)은 사라지고 돈에 따라 움직이는 업적제조기계들만 우글거리고 있다.

자살률 최고, 노동시간 최고, 1인당 술소비 최고, 노인들의 만족도 최저, 정신장애발생률의 꾸준한 증가 등 화려한 기록을 가진 이 사회에게 이 땅의 예술가들은 경고음을 울려왔다. 이창동 감독의 <시>와 <밀양>,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등이 그것인데, 특히 타자의 슬픔에 무감각한 사회를 그린 <시>는 세월호 사건의 알레고리였다. 세계 영화제가 이들을 알아본 것과 달리 한국 대중은 이들을 외면했다. 이들의 흥행은 저조했다. 예술가들의 경고음은 또렷하게 울렸지만, 귀 먹은 사회에 세월호 참사는 다가오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은 성공과 돈과 권력을 숭배하고, ‘나’ 만을 중시하고, 내가 불편하면 타자에 대한 책임을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 유민 사회의 예견된 인간성 침몰이요, 인문학적 재난이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박정희 시대와 함께 침몰한 세월호

행정학과 강명구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 달 여는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으로 병가(病假)를 내야했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위도 웨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삼풍 백화점 붕괴 등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사고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오명 하에서도 세월호 참사는 특별하다. 물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들어 세월호 참사를 하찮게 치부하는 단순 무지한 언술(言術)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어느 대형사고도 세월호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였음을 상기하건대 세월호는 유별나고 그런 의미에서 시대사적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만큼 그 영향력이 심대하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요지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에서 1960년대 이래 반세기 동안 구축하였다고 세계만방에 크나큰 자부심으로 선언해온 박정희 모델의 침몰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어왔던 대형 사고는 인재(人災)인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항상 정치적 논란과 더불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심할 경우 알게 모르게 민심이반이라는 형태로 정권의 명운과도 연계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대형사고도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질문은

세월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념해야한다. 이 질문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유, 불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다. 국가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더불어 이번 사고는 그간 우리가 발전의 금과옥조로 삼았던 시장의 존재에 대하여도 근본적 성찰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른바 칼 폴라니가 (Karl Polanyi)가 “악마의 맷돌” (satanic mill)이라고 지칭한 규제받지 않은 무한정의 이윤추구 체제는 공동체적 인간성을 시장이라는 맷돌에 으깨고 부수어 파쇄하였음을 세월호는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세월호는 넓게는 근대문명 좁게는 대한민국이 이루어냈다고 자부하는 문명 혹은 발전의 진면목이 실제로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반사물(反射物)에 지나지 않음을 똑똑히 목도하게 만들었다. 전(前)근대적 사고로 침몰하는 배 안에서 초(超)근대적 인터넷 중계방송으로 스스로의 죽음을 실시간각 직시해야하는 공포를 전 국민이 동시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에 이와 같은 시대사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함은 1960년대 이래 우리가 가꾸어왔다고 자부하는 근대국가 형성과 변천과정을 되짚어 봄에 따른 정연한 추론의 결과이다. 박정희는 가장 강력한

지지층으로부터는 유사 이래 한반도에서 이 이상 풍요로운 적이 없었던 시대를 이끌어낸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 받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비판자들로부터는 개인의 정권욕을 위해 인권을 유린하고 분단을 고착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간교한 독재자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그가 구축한 한국형 발전 모델은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대다수가 부인하기 힘든 몇 가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존재 자체로서 모든 국민을 압도한 국가, 잘 살아보려는 욕망을 자극한 시장주의,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사회문화적 믿음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변적 요소들로 간주되던 ‘사실’들이 이번 세월호 침몰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박정희 체제는 비록 그의 뜻하지 않았던 피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역과 계층에 근거한 강고한 기득권을 구축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를 논하지 않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논하기 힘든 이유다. 그러나 동시에 박정희 체제는 더디지만 서서히 형해화(形骸化)하고 있음을 지난 1987년 이래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아마도 세월호는 그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 사건일 것이다. 우선 박정희 체제는 1987년의 민주화 운동과 6. 29 선언을 계기로 정치적 균열을 경험하였다. 초강력 중앙집권 체제하의

일사불란한 군사독재를 대신하여 정당 정치가 활성화 되고 민간 및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시민사회운동의 역할도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 획득이라는 봄날은 10여 년을 채 가지 못하고 1997년 세계화의 파고 앞에서 더욱 큰 시련을 감내하여야만 하였다. 이른바 “IMF 사태”로 명명된 외환 위기는 박정희 체제가 구축하였다고 자부한 경제적 구조물에 커다란 구멍을 내 놓았다. 박정희식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고 아래서 움츠러들었고, 국내적으로는 관료적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국가를 능가하려는 재벌 앞에 점차로 무력하여졌다. 5000만 국민의 대한민국 정부 2014년 일 년 예산이 350조를 약간 넘는 정도인데 2013년 삼성전자 한 회사의 매출액이 228조에 순영업이익이 36조인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진대, 그간 국가발전의 중추였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지도급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도 예전 같을 수 없다. 애국심에 불타 뿔뿔을 들고 새마을 운동을 독려했다는 전설적인 공무원들은 이제 퇴임 후 그들이 키워냈다고 자부하는 재벌들에 간택당하기 위하여 전관예우가 지니는 특별한 힘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는 정치, 경제적으로 이미 심각한 균열구조를 드러낸 박정희 체제에 사회적으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간 대한민국 사회는 경제적 풍요의 와중에도

OECD 통계가 여실히 드러내듯 극심한 발전의 후유증으로 중병을 앓아왔다. ‘한 손에는 총을 잡고, 한 손에는 망치 들던’ 1970년대의 애국심에 순치(順治)되었던 국민들은 더 이상 새마을 찬가를 부르지 않고, 1997년 외환위기 때 손가락을 비틀어 금가락지를 빼내던 애국적 시민들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오자 오히려 장롱 속으로 금가락지를 감추는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소비자가 되었다. 어떤 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속 불가능한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체제가 배태할 수밖에 없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 체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공화 시민적 충성심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참사 피해자들이 “이게 국가냐!”고 외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박정희 체제가 세월호와 함께 서서히 그러나 어찌 채 손쓰지도 못한 채 확실하게 침몰해가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외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어리고 어린 생명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 고해야한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역설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젊고 힘찬 세대가 늙고 병들어 가는 세대를 대체해가는 것이 순리일진대 우리는 젊고 힘찬 것들이 목숨을 바쳐 시대의 경고음을 발하니 이것은 비극이고 역설이다. 동시에 아버지가 구축한 체제를 그의 딸이 꼭 같은 자리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허물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일 수 없다. 그나마 이런 비극적 아이러니 하에서도 소극적(笑劇的) 요소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니, 실제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구체제를 앞장서서 부수고 있는 당사자가 본인 스스로는 부친의 가업(家業)을 물려받아 구체제를 온전히 복원시키고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침몰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아이러니하고 동시에 비극적인 코미디를 역사적 시점에서 관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아직 현실은 답답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누구 말대로 “옛 것은 죽어 가는데, 새 것은 태어나고 있지 않다.” 배우고 익히는 자가 느끼는 ‘지적(知的)’ 비판주의의 실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쉰(魯迅)의 시 <고향> 중 한 구절로 ‘의지적’ 낙관주의를 불러 일으킨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1) 그러나 반세기에 걸쳐 장수(長壽)를 자랑하는 이 체제가 쉽사리 바뀌지 못하고 그나마 그럭저럭 지탱하는 것은 가장 크게는 남북 분단 때문이고 작게는 지역갈등 때문이었다. 이른바 ‘적대적 의존관계’하에서 남과 북의 체제는 서로가 서로를 공고화시켜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존하여 생명줄을 연장시켜주었고, 선거 때만 되면 지역대결이 ‘구세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중 지역갈등은 새로운 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심축으로 진입하면서 희석되어가고 있고 오히려 세대간 갈등이 지역간 갈등을 서서히 대체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선거 때마다 목도하고 있다.



정치학자의 눈으로 본 세월호 사건

정치외교학과 안재홍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글쓰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국민 대다수가 분노를 넘어 가슴앓이를 했던 시대적 상황을 아직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싸늘한 정적이 잠시나마 정파와 이념 간 갈등의 현장에서도 감돌았던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아직 기억이 없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원인과 처방 관련 담론들이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담론의 대열에 뛰어드는 것조차 어둡고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한 생명의 줄을 놓아야 했던 순수한 영혼들에게 예의가 아닌 듯싶어 조심스럽다. 이 글에서는 현실 정치를 다루기보다는 논의를 정치(경제·사회)학의 시각에서 세월호 사건을 이해하는 것에 국한시키려 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세월호 사건은 근대(modernity)의 절차적 합리성이 우리사회에 정착(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주지하다시피 원칙이 무시되고, 공공성이 와해되고, 혼돈의 와중에서 ‘적폐’와 ‘관피아’로 표상되는 생존을 위한 끈끈한 연대가 독버섯처럼 사회 전반에 퍼진 결과다.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국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늘 있어왔다. 내가 두려워하는 점은 근대로의 이행을 지지해왔던 사회·문화 공동체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와해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폴라니(Karl Polanyi)가 지적하듯이 근대로의 이행은 전근대적 공동체에 ‘내장된’(embedded)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본주의 시장과 국가의 행정적 지배에 의해 완전히 개인화·원자화 된 적이 없다(Polanyi 1944; Arendt 1958). 전근대 사회에 비해서 개인화·원자화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문화 공동체가 역사를 거쳐 자아낸 ‘의미의 망’ 속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지켜온 ‘피플’(people)이었다(Geertz 1973). 세월호 사건의 충격에 갇힌 우리사회는 ‘국가 개조’의 기치를 내걸 정도로 근대적 합리성의 제도화에 몰입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우려해야 하는 점은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 ‘의미’(meaning)의 체계가 해체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 일부가 물질과 생존의 조건에만 반응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폴라니가 주장하듯이 서구가 아프리카에서 행한 만행의 본질은 경제적 자원의 탈취가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구현하는 제도들을 와해시킨 시장이란 제도에 있었다. 나는 세월호 선장의 탈출 장면과 선원들의 행위에서 짐승화 된 인간의 단면을 보았다. 이것이 몇몇 개개인에 국한된 정신분열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변형이 낳은 결과인 한 현재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성찰해보아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다.

인간은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고, 공유된 의미의 창을 통해 세계와 자신을 인식한다. 제도들은 상호 연계된 체 사회적 공동체를 지지해 하나의 ‘레짐’(regime)을 구성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적응해나가는 동시에 내적으로는 통합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이질적인 문명에 급격하게 노출된 결과 사회 구성원들의 존재를 구현하는 제도,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의 체계가 해체된 사례가 역사적으로 적지 않았다. 이 때 사회 구성원들은 공중을 지향하는 존재,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정치적 동물’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과 같은 종(種)’으로 퇴행했다.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휩쓸려들었다. 신자유주의와 사회 조직의 네트워크화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와 정도가 적절했는지는 성찰해보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속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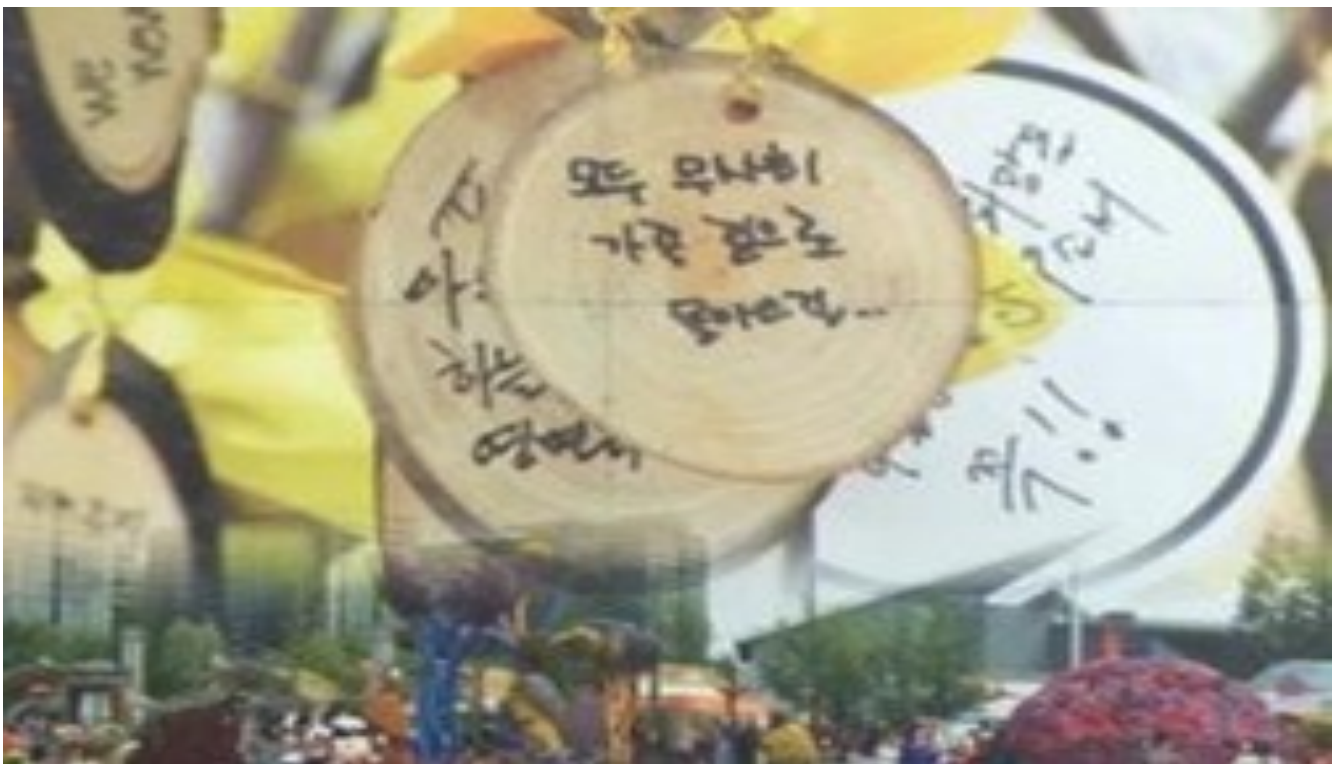
OECD 국가를 압도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와 네트워크화의 부정적 측면, 예컨대 비정규직, 사회적 불평등, 소외에 의한 자살 등의 증가에서 단연 선두를 차지했다. 과연 사회적 관계의 시장화와 네트워크화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견인차였는가? 역사적으로 우리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취약했으나 집단행동으로 공공악재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특유의 사회와 국가를 건설했다. 국가와 사회를 다시 역동적으로 작동시키는 데에는 국가 지배체제의 합리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역경을 공동으로 극복해 온 사회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1997-8년 그해 겨울, 장풍 속에 깊이 숨겨 놓은 각종 금불이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선 피플이 있었기에, 대량 실직과 비정규직화를 감내한 피플이 있었기에 우리는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다.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자행되었는가? 국가와 시장(기업)은 희생을 감내했던 이들을 감싸 안았는가? 오히려 국가는 경쟁과 사회적 배제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주도했으며 이는 우리사회에 내장된 의미의 체계에 치명적인 상흔을 남겼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아직도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 가능한지를. 경쟁의 정글 속에서 관은 관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생존을 위한 연대의 망을

구축했으며 사회적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제도들은 부분적으로 망가졌다. 공적 영역의 일부가 무너진 것이다. '정의' 또는 '원칙'으로 시작되는 표현들은 무능한 사람내지는 사회적이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굳어진지 오래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그리고 시장과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자행된 퇴행이 정점은 찍은 사건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소수가 다수를 구조적으로 지배했을 때, 정의롭지 못한 연대가 부와 권력의 고리로 작용했을 때, 고려와 조선에서 그러했듯이, 국가는 붕괴했다. 베버가 지적하듯이 국가는 '정치 공동체'다. 현 정부에 굳이 한마디 던지자면, 국가를 개조하고 싶으면 관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과

함께 공동체에 소통과 협력의 장을 재건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에 역동성이 되살아날 것이다. 소통과 협력의 장은 TV를 보면서 울고 대화하면서 울고 그러면서도 분노보다는 침묵으로 절제하며 국장을 치루고 있는 피플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때 형성된다. 대학사회는 무엇이 피플의 희망을 꺾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특 집

세월호 참사의 심리적 트라우마

정신건강의학과 신 윤 미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생존자들, 망연자실한 유가족들, 고인이 되신 분들의 친구, 교사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모두 슬픔에 빠져 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를 바닥까지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를 겪는 이들은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울하다. 학창시절 가장 소중한 추억인 수학여행 중 발생한 세월호 참사, 무책임한 어른들에 의한 사고, 희생자들은 구출되지 못한 채로 전원 사망, 무분별한 언론 보도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단원고, 안산 트라우마 센터에서 심리지원을 시작했다. 아주대병원 정신과는 유가족 형제, 자매들이 많은 단원중에서 언니, 오빠를 잃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순식간에 언니, 오빠를 잃은 아이들은 멍한 표정들이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생전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아이들은 힘겨워보였다. 매일 경험 속에서 언니, 오빠랑 함께 했던 것들을 회피하고 싶고, 어디선가 언니가 달려올 것 같은 느낌들 속에서 아이들은 매일 싸우고 있다. 처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른들, 사회에 대한 분노였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스컴 보도 과정에서 아이들은 매일매일 상처를 받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트라우마..사전적인 의미로는 뇌에 각인 될 만큼 영구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충격이라고 정의한다. 유가족들 모두 상당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고를 목격하면서 ‘언니 오빠는 최후의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오빠랑 싸웠는데, 아직 미안하단 말도 하지 못했는데. 언니랑 약속한 일이 있는데.. 언니, 오빠랑 이루지 못한 일들, 약속한 것들 때문에도 마음이 저린다. 사회가,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고 있다.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고통도 힘들지만 외로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은 치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애도과정을 마치고, 각성 상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편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침묵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압, 억제하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으로 인한 더 깊은 상처

사고 발생 후 얼마동안 단원고 앞에는 취재진들의 무분별한 촬영으로 단원고 학생들이 담요를 뒤집어쓰고 등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이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언론의 배려가 필요하다. 언론은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 생존자들의 상처가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론의 부주의한 취재가 아이들의 상처를 깊게 하고 있다.

사회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세 월 호 참 사 53일 제.. 유 가족 들 은 한결같이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고 말한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는 일회성이어선 안된다. 뉴욕은 아직도 '9.11'치유 광고가 시내에 설치되어 있고 당시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테러로 무너진 미국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자리 '그라운드 제로'에 국립 9.11 추모박물관이 세워졌다. 이렇듯 정부와 사회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건의 명확한 해결

마지막으로 유가족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고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건의 명확한 해결이다. 유가족들과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사건 해결의 모습이 절실하다.





아주대학교 교수회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608
 전자 메일: juok@ajou.ac.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전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63호

소 식

I. 제 58차 대의원회 개최

5월 13일 12시에 종합관식당에서 제 48차 교수회 대의원회 회의(긴급)가 열렸다.

본 회의의 보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2일 개최되었던 대학평의원회의에서 상정된 2016학사과정 입학정원 조정안(학칙 개정 제 21조(학생정원))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신중하게 논의, 결정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 평의원회의는 학생 인원 감축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면밀한 검토와 대학 내의 의견 수렴이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본 사안의 득과 실,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데 의견을 수렴하였음을 밝혔다.

논의사항으로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전체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나, 전체 교수회의 개최 시 참여 인원 및 시간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제공되는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교수들이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소 식

II. 정원감축에 대한 학교-교수 wide forum

지난 5월 21일 4시 30분부터 약 3시간동안 종합관 503호에서 정원감축에 대한 와이드 포럼이 열렸다.

본 포럼은 58차 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2016학사과정 입학정원 조정안(학칙 개정 제 21조(학생정원))에 대하여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이재호(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학본부 측 대표로 김민구 기획처장, 박영동 교무처장이, 교수대표로 김준한(사회대) 교수와 이순일(자연대) 교수가 자리하였으며 40여명의 교수와 20여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다.



편집위원회 : 구형건(편집책임),
 강충권, 김상배, 김혜선, 노명우, 이재호